

2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4.97	↓ 코스닥	860.68
	(-44.77)		(-22.04)
↑ 금리 (국고채 9년)	3.930	↑ 환율 (원·달러)	1339.70
	(+0.040)		(+9.60)

해파리·명태살 등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국내 수입 확인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비명계 반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대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李 ‘부결 촉구 메시지’ 역풍으로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가피
리더 부재 민주당 내부혼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 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으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으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에 맞부딪히면서 아쉬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

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

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 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매파적 건너뛰기’ 추가 인상 시사에 긴축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5.0%포인트(p) 인상한 연준은, 올해 6월 한차례 동결한 뒤 7월 또 다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금리인상 수준이)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금리가 적정인지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FOMC 의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수준이 5.6%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금리가 5.25~5.50%임을 감안하면 오는 11월과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의원은 7명, 올해 안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며 “인플레이션 수준이 3개월 이상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야 하는 만큼 데이터를 통해 향후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6월 전망치 4.6%와 비교해 0.5%p 높게 전망했다. 금리수준이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할)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 금리인하를 결정한다면, 금리인하 요인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금리 상승이 될 수 있다. 인하시점은 오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혁신·보호 초점 자율규제... ‘온플법’ 갈등은 숙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온라인 시장은 어느새 사라지고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편집자주〉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과 땀 내년 자율규제기구 설립

시민단체, 전면 반대·대항 선언
빅테크 독식·불공정 행위 우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

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와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친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 여야 “이규용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 않고 25일 처리 협의” /사진 뉴시스

▲ 여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머그샷 공개법’ 의결
▲ 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대북 독자제재 발표



▲ ‘주소 기반 로봇배송 확산’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 금지—확산 방지로... 제주 ‘노키즈존’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 뉴시스